

“조합원 사망 공권력 책임”... 노동절 앞두고 ‘전운’

민주노총, 대정부 투쟁 예고... 전국서 동시다발 집회 광주·전남 화물연대 등 2000명 참여...원청교섭 촉구도

5월1일 노동절을 앞두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대정부 투쟁을 예고한 가운데 광주·전남 지역에서도 대규모 참여가 이어질 전망이다.

27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 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노동계는 최근 경남 진주 CU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물연대 전남본부 소속 서광석 조합원(광양컨테이너지부장) 사망 사고를 계기로 책임자 처벌과 원청 교섭을 촉구하며 전국 단위 집

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광주·전남에서는 현재 공공운수노조 조합원 1000여명이 집회에 참여하고 있으며, 노동절 당일에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을 포함해 최대 2000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노총은 28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BGF리테일 본사 앞에서 수도권·충청·강원권 결의대회를 열고, 같은 날 오후 3시에는 진주 물류센터 앞에서 호남·영남·제

주권 결의대회를 각각 개최한다.

이어 노동절 당일인 5월1일에는 ‘열사 투쟁 노동절 대회’를 열고 투쟁 수위를 한층 높일 방침이다.

앞서 엄길용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서울 대치동 BGF리테일 본사 앞 기자회견에서 “경남경찰청장뿐 아니라 경찰청장과 행정안전부 장관까지 책임을 물어야 하며 대통령의 사과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정호 수석부위원장 역시 “공권력 남용 문제에 대해 정부 차원의 책임 있는 사과가 없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노조는 기자회견 이후 BGF리테일 본사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사망 조합원을 기리

는 시민 분향소를 마련했다.

이후 CU의 전국적 물류 거점인 CU진천허브물류센터에서 분향소 설치 투쟁을 진행한 뒤 전면 봉쇄에 나섰다. 화물연대는 사측이 낸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취하와 진정성 있는 교섭 이행 등이 관철 될 때까지 전면 봉쇄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공공운수노조는 같은 날 청와대 본수대 앞에서 ‘원청 교섭 실현’을 촉구하는 농성 돌입 기자회견도 열었다. 노조는 “개정 노동법 시행 이후에도 공공기관의 교섭 이행이 미흡하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했다.

노조 측에 따르면 현재까지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한 공공기관은 부산교통공사와 한국집월드 등 일부에 그치고 있으며,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한전 KPS 등은 사용자성이 인정됐음에도 교섭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역시 ‘교섭 의무 판단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정부가 사용자성을 부정하거나 교섭 의제를 제한하려는 공공기관에 대해 조건 없는 교섭에 나서도록 지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공공운수노조는 28일부터 노동절까지 청와대 사택에 인근에서 피켓팅을 이어가며 원청 교섭을 촉구하는 농성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노동절 집회가 과격 양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해 적정한 경찰력과 장비를 배치 등 현장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은 진주 CU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 사고 당시 현장에 담은 CCTV 영상 등 객관적 자료를 분석하며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이후 경찰 집회 관리에 허점이 있었는지 등을 판단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경찰이 체포한 화물연대 조합원은 총 4명이다. 이중 흉기를 이용해 자해하거나 경찰관을 위협한 2명을 구속해 송치할 예정이고, 다른 2명은 석방됐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5·18-부마항쟁 헌법 수록을” 광주기독교교회협의회 촉구

광주지역 기독교계가 한국 민주주의의 핵심 역사들을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기독교교회협의회(광주NCC)는 28일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18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을 헌법 전문에 수록할 것을 정치권에 공식 촉구할 예정이다.

단체는 성명을 통해 한국 민주주의의 흐름을 4·19혁명에서 시작해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으로 이어지는 ‘연속된 역사’로 규정했다. 이들은 “억압과 폭력에 맞서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지켜낸 국민의 투쟁이자 헌정질서를 바로 세운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광주NCC는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을 “국가 폭력과 독재에 맞서 국민이 민주주의를 지켜낸 결정적 전환점”으로 평가하며, 특정 지역의 사건이 아닌 대한민국 전체가 공유해야 할 헌법적 가치라고 주장했다.

또한 개헌 논의와 관련해 “지금도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고 지적했다.

광주NCC는 “과거의 희생 위에 세워진 민주주의를 온전히 계승하지 못하는 공동체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며 “민주주의의 역사를 헌법에 새기는 과정이 실현 될 때까지 교회와 시민사회가 연대해 행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사랑의 밑반찬 나눔 27일 광주 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 열린 돌봄 아동을 위한 밑반찬 나눔 행사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돌봄 아동에게 보낼 밑반찬을 만들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광주·전남 지난해 1만5000회 ‘낙뢰 폭탄’

기상청, 낙뢰연보 발간... 대기 불안정 7월 집중 발생

지난해 광주·전남 지역에서 약 1만 5000회에 달하는 낙뢰가 관측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름철, 그중에서도 7월에 발생이 집중된 것으로 집계됐다.

기상청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 낙뢰연보’를 발간했다. 조사 결과 지난해 광주 지역 낙뢰 횟수는 총 1716회로 집계됐다. 단위면적(km) 당 발생 횟수는 3.45회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월별로는 7월이 853회로 가장 많았으

며, 1·2·3·4·6·10·12월에는 낙뢰가 관측되지 않았다.

자치구별로는 광산구가 884회로 가장 많았고, 단위면적당 발생은 7월 서구가 2.71회/km로 가장 높았다. 전남 지역은 총 1만3318회로 충남(2만8165회), 전북(1만5714회)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았다. 단위면적당 발생 횟수는 1.08회로 나타났다. 전남 역시 7월에 6659회로 낙뢰가 집중됐으며, 2월과 12월에는 발생

하지 않았다.

지역별로는 영광군이 2007회로 가장 많았다. 단위면적 기준으로도 7월 영광군이 3.18회/km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전국적으로는 낙뢰의 57%가 여름철(6~8월)에 집중돼 최근 10년 평균과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다만 월별로는 차이를 보여 6월과 8월은 평년보다 적었고, 5월과 9월은 상대적으로 많았다.

연중 낙뢰가 가장 많이 발생한 달은 7월로 전체의 약 33%인 3만5372회가 관측됐다. 특히 7월17일에는 강한 대기 불안정으로 많은 비와 함께 하루 동안 2만 3031회의 낙뢰가 발생해 연중 최고 기록을 세웠다. 송태영 기자 sty1235@

목포대 “전남 의대 신설 더 못 미뤄”

“순천대 협의·조율없는 정부확약 조건 내건 것 유감”

목포대가 전남지역의 숙원사업인 국립과대학 신설을 두고 최근 순천대가 대학 통합의 전제조건으로 ‘정부의 예산 보장’ 등을 내걸자, “의대 신설을 지연시키는 행위”라며 유감과 우려를 표명했다.

목포대는 27일 송하철 총장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전남의 의료 공백 해소와 국립과대학 신설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180만 도민의 염원이다. 새로운 조건을 제시하며 대학 통합 논의를 어렵게 만든 순천대의 입장 변화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대 신설을 위해 안을 확정할 수 있는 ‘골든타임’은 5월까지다. 지역민의 생명권 보장을 위해 대학통합과 전남 의과대학 신설이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양 대학은 그동안 2024년 11월부터 통합을 전제로 전남 의대와 2곳에 대학병원을 세우기 위해 협력해 왔다. 특히 지난 3월에는 두 대학 총장이 만나 병원 설립을 위해 정부와 소통하기로 뜻을 모았고, 순천대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보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순천대는 지난 20일 ‘정부의 확약과 예산 보장이 선행되지 않으면

통합 논의를 지속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새롭게 내놓으면서 두 대학의 통합 논의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에 대해 목포대는 “순천대의 입장 변화가 양 대학 간 사전 협의와 조율 없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새로운 전제조건은 현 시점에서 대학통합 논의를 사실상 중단하겠다는 선언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목포대는 정부의 확약을 선행조건으로 내건 것은 정부가 현실적으로 수용이 불가능한 요구라는 입장이다.

목포대는 “지금 필요한 것은 예비 인준 등 후속 절차를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의과대학과 대학병원 운영 모델을 합리적으로 마련하고, 정부 및 관계 기관과 면밀한 협의를 진행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송하철 목포대 총장은 “전남 의과대학 신설은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된다”면서 “앞으로 대학통합과 전남 의과대학 신설 논의가 서부권과 동부권의 균형발전, 그리고 도민 건강권 보장이라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전남도,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의해 국립의대 신설과 대학병원 문제를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목포=이훈기 기자 leek2123@

광주지방법원 판결공시
제 1심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2025고정333 폭행 피고인 이현의 위 피고인은 폭행죄로 기소되었으나 증거없음을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습니다.
2026년 4월 16일 판사 최기현

http://in-point.kr
1%부족할 까지도 디자인 하다.

Design Specialist & Creative Think
디에스&시티

실내건축디자인·설계 | 실내건축공사업 | 3D 영상·모넬링 / 조경도
육·내외사인물 디자인 / 설계 | 경관 디자인 / 설계 | 산악디자인

(주)디에스시티 | 광주광역시 북구 태봉동 53 (신안동, 2층)
디에스엔시티(주) |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신동로 1-1
대표전화 | 062.433.8800

kidp 신업디자인전문회사

Printing
Promotional item
AD
Design
NACOS'S
PR
Advertisement
Solution

나의 소통코스
중합광고솔루션 - 나코스(유)

www.nacos.co.kr NAVER 나코스 검색

1004섬 신안 신의도 찰나를 담다!

YouTube
*구글이미지가 있으면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광남일보 iTV
구독·좋아요·알림 설정까지!!

광남일보 iTV 프로그램

- 호국학 자초의 성지, 전남 투룬산 대룡사
- 나주지역 포교의 중심도량 덕룡산 불희사

광고·사정문의 062)370-7077